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특수교육법은 유아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대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가족·통학·보조인력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역할을 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교육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6,352학급에 불과하던 특수학급은 2020년 11,661학급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특수학교는 149개교에서 182개교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당시 겪었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학 부지 내에 특성화 특수학교를 신설했고, 60%대에 머무르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80%대까지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했다지만, 한계도 많았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교육 공간이 없어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순서가 와도 선생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장애 차별, 학교폭력 등의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장애 학생과 가족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학교 교육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지만, 장애인 교육은 수업 방식, 소통 수단, 교과서 등의 특수성 때문에 뒤따르기 어려웠습니다.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학생과 가족이 져야 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상황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니, 감당하기 버거운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저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게 변화한 사회 환경과 장애인 교육 수요에 맞게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장애 차별 등 사건·사고가 겹겹으로 드러날 때마다 법을 조금씩 고쳐왔습니다만,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의 양질 전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 선정과 교육지원 내용 결정 시 아동 최우선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 시도 → 시군구에 이르는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차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장애 인권교육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통합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근거를 마련했고, 예비 교사의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 양성기관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개별화 교육 내실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도 제안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든든한 발판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장과 교육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